
통일부 업무보고

2026. 8. 5.

I. 지시사항 및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

1 지시사항 추진상황

◆ 대통령 지시사항 9건 중 모두 완료(완료율 100%)

연번	지시사항	추진 실적
1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중단 대책 마련 (‘25.6.10., 첫 국무회의)	○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 정부 출범 이후 살포 “0”건 * △항공안전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25.12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항공안전법 개정(‘26.5월), 살포시 처벌규정 강화 * ‘대북전단 대응 협의체’ 운영(‘25.6월~), ‘살포 중단 종합대책’ 마련(‘25.7월)
2	표류 북한주민 송환 (‘25.6.10., 첫 국무회의)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주민 해상 송환 완료(‘25.7.9.) * 표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관계기관 회의(6.19.,6.24), 유엔사 협의(7.2~7.9.)
3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25.8.18., 13번째 국무회의)	○ 남북합의 이행 전담부서인 남북회담본부 복원(‘25.11.4),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방안’ 수립(‘25.12.18.) *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 개최(‘25.9.19) △남북합의서 제도화 및 이행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25.10.1.) △DMZ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재개(‘25.10.15., 국방부) △「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 구성(12월) 등
4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25.12.19., 대통령 업무보고)	○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25.12.30.) * ‘노동신문’ 소장 전국 108개 기관 중 79개 기관에서 대국민 열람서비스 제공 * 온라인 공개(北 사이트 개방)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계류중
5	평화·통일 인식개선 교육 확대 (‘25.12.19., 대통령 업무보고)	○ ‘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교육 확대 추진 * 원내교육과정 전면 개편(‘26.2월) 및 기본방향·기본교재 개편·발간(‘26.4월) 등 * 초중고교(12,000여개) 교사 등 3,940명을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으로 위촉(1차, ‘26.6월), 2차 확대 추진(6,000여명 추가 위촉)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25년 15명 → ‘26년 250명 내외)
6	비전향 장기수 제3국 경유 송환 (‘25.12.19., 대통령 업무보고)	○ 통일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 시행, 북한 무응답으로 상황 종료 *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 신고 수리(‘25.12.18., 12.24., ‘26.2.24.) *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시도(‘25.12.18.~,직·간접) * 안학섭(비전향장기수), 송환 협의를 위해 중국(베이징) 방문(‘26.2.21.~2.25.)
7	통일연구원 소속 이관 검토 (‘25.12.19., 대통령 업무보고)	○ 통일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사항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지속 논의 예정 * 통일부,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연구원 등
8	안보관계 장관회의 추진 (‘25.12.19., 대통령 업무보고)	○ 안보관계 장관회의 3회 개최(‘26.1.16., ‘26.2.13., ‘26.4.3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계기 리스크 집중점검”(25.10.21.)은 전부처 지시사항으로 통일부 시스템, 시설물 등 점검 및 안전 강화 조치 실시 완료

2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

연번	지적사항	연도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완료시기
①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				
1	정권 변동에 상관없이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2022 2025	○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안 발의(3.20. 윤후덕 의원), 타부처 의견조회 및 관련 세미나 지원 * 주요 내용: △통일방안 수립 절차·사유 명시, 법적 효과 부여 △사회적 대화, 평화통일공공외교 추진 근거·내용 △지역별 통일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근거 등 ○ 외통위 여야 간사실 및 법안소위 의원 대상 협조 요청 예정	'26.12월
2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필요 * 무연고 북향민 아동·청소년 연락 두절, 중복조사 방지,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고위험군 북향민 관리, AI기반 협력체계 구축 등	2020 2021 2022 2024 2025	○ 북향민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지속 강화 [주요 추진 실적] ① 생일 등에 무연고 북향민 아동·청소년 안부전화 실시 ② 통일부·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조사 정보 공유(22.11월) ③ 통일부 하나넷 -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 연계(15년~) ④ 독거세대 안부확인 사업 전국 확대(24.12월) ⑤ 「하나원콜센터」(1533-2020) 운영, 24시간 상담 가능 체계 구축(25.12월) ○ AI 돌봄 전화서비스 시범 도입('26.7월)	'26.7월
3	하나원 내 안성 본원과 화천분소 통합교육 방안 마련	2020 2022 2024	○ 북향민 입국자 감소 상황 등을 반영, 하나원 조직운영 효율화 [주요 추진 실적] ① 안성본원에서 남녀 통합교육 운영 개시('26.2.20.) ② 화천분소는 수료 북향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 ○ 화천분소를 (가칭)「국립사회통합원」(대외명칭: 화천 새봄마루)로 전환, 사회진출 북향민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 북향민 대상 직업교육심리치료 기관으로 기능 전환 - 공중보건의 3명(내과, 치과, 한방과) 활용, 화천 군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에 시설 개방	'26.12월
4	남북경협 중단 피해 기업 보상방안 마련	2020 2024 2025	○ 경협·교역·금강산·개성공단 기업에 정부예산을 통한 '피해지원' 등 다각적 지원 실시 구 분	

연번	지적사항	연도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완료시기
② 언론 반복 지적사항				
5	청년층 통일 무관심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5년 처음으로 20대 '통일 불필요' 과반 응답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 '청년층 통일 공감대 제고 대책 필요성' 지속 제기 【주요 추진 실적】 ① '한반도평화경청단' 신설('25.11월) 및 '2030청년자문단'·'장관-청년 미래대화' 등 청년과의 소통 플랫폼 구축 ② '평화경청 ON 캠퍼스' 등 청년 대상 소통 기회 확대 ③ 초중고교(12,000여개) 교사 등 3,940명을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으로 위촉(1차, '26.6월) ④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등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참여형·체험형 교육 확대 ⑤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 찾아가는 경청대화 추진, 청년인턴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청년 소통 기획·지속 ○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2차 확대 추진(6,000여명 추가 위촉), 참여형·체험형 교육 지속 확대	'26.12월
③ 민원 반복 제기사항				
6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의 근본적 해결 요청	2020 2024 2025 2026	○ ▲오물풍선 ▲확성기 소음 방음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 * 24년 32회 6,300여개의 오물·쓰레기 풍선 남하 등 * '24년 102건, '25년 13건 등 우리부에 관련 민원 접수 【주요 추진 실적】 ① ▲대북 확성기 중단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선제적 신뢰 조치 추진 * 대북전단 살포 중단 종합대책 수립('25.7.30.)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안전법」 개정 등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제도화('25.12월) ③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발족('26.2.26.) * 통일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국가안보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참여 ④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 무인기 무단 침투 행위시 처벌 강화 조치('26.6.16.) ⑤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 경청(장관1회, 차관4회 등) * ▲장관, 강원도 고성 방문, 의견 경청('26.1.21.) ▲차관, △접경지역 주민과 평화 토론회 개최 (경기 파주 '25.11.10. / 강원 철원 '26.6.12.) 등 ○ 정부-접경지역 주민 간 소통채널 지속 운영, 접경지역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청	'26.12월
7	北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 유출 의혹 관련 정부에 진상규명 요청	2025	○ 北 평산 우라늄 폐수 방류 의혹 보도('25.6.10.) 후 ▲국내 유입 ▲건강 영향 우려 등 민원 지속 제기 * '25.6.~'25.8월간 우리부에 관련 민원 25건 접수 【주요 추진 실적】 ① 통일부·원안위·해수부·환경부·국방부·국정원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25.7.3.) ②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25.7월~현재) ⇒ '25년(매월), '26년(분기별) 조사 결과 "이상없음" 발표 ○ 정기 모니터링 지속 실시 등 국민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적극 대응	'26.12월

II. 상반기 주요 성과

1 “2026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6대 변화

지난 정부 시기	이재명 정부 1년 후
통일부의 핵심 기능 제거, 식물화 ① •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 폐지 * 617명(51개 과) → 536명(42개 과)	통일부의 조직 복원, 정상화 ⇒ •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등 부활 * 533명(42개 과) → 600명(49개 과)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 일촉즉발 위기 • 南 ‘자유의 북진’ vs. 北 ‘적대적 두 국가’ - 주적 규정, 선제타격 위협, 북한주민 해방 주장 등 ② • 대북전단·확성기 vs. 대남 소음방송·오물풍선 - 접경지역 주민 두통·수면장애, 불안한 일상 • 무인기 불법 침투, 군사적 충돌 위기 조장	평화공존의 희망, 일상의 평화 회복 ⇒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표, 혐구·육설 급감 - 北 축구단 방문, 상호 존중의 경기·응원 시현 • 전단·확성기 중단 → 소음·오물풍선 중단 - 건강한 일상 회복, 외부 관광객 증가(전년대비 25%) - 접경주민지원(피해 접수중, 1년 피해 1인 최대 146만원) • 무인기 침투 원천 차단, 접경지역 평화안전망 구축 -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안전법」 개정, 연석회의 운영
북한주민 접촉 차단, 북한자료 접근 통제 ③ •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 제정(‘23.6월) - 기본적 거부, 예외적 수리(수리율 62.9%) •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를 특수자료로 분류·통제	민간 접촉 전면 허용, 신뢰 기반 정보 개방 ⇒ •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 폐지(‘25.7월) - 민간의 단순 접촉 전면 허용(수리율 99.0%) • 노동신문 개방, 자유 열람 허용
안보 중심 주입식 교육 ④ • 이념 편중, 북한의 위협 등 부정적 측면 부각 • 학생 평화통일 인식 저하	평화 중심의 참여형 교육 ⇒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발간(2월) • 학교 중심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확대·개편 - 지역사회 1,000명 → 교원·교수 3,940명(‘26년 상반기)
보호·관리의 대상으로서 탈북민 ⑤ • 낙인과 배제의 언어인 ‘탈북민’ 사용 • 통제와 관리의 하나원 운영 - 휴대폰 사용 금지, 가족·주말 위주의 제한적 면회, 위압적인 철조망 경계시설	자립·성장의 주체로서 북향민 ⇒ • 인정과 통합의 언어인 ‘북향민’으로 변경 • 자율과 개방의 하나원 운영 - 개인별 스마트폰 지급, 면회 대상 확대, 숙박면회 전면 허용, 미관형 울타리 등 열린 환경 조성
2030세대 한반도 정책 참여 기반 부재 ⑥ • 청년 의견수렴·정책반영 체계 미비 •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접근, 소극적 소통	장관 직속 청년의견 경청 전담부서 신설 ⇒ • 「한반도평화경청단」 설치·운영 - 80년대생 청년 단장 외부 영입 • 「청년 주권 사회적 대화」 추진 -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청년대표 15인 등) 출범(6월)

2 정세 평가 및 대응 방향

□ 現 정세 평가

○ 북한의 대남·대미 강경한 기본 입장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9차 당대회*에서 적대 기조 재확인(2월), 헌법상 ‘조국통일 3대원칙’ 삭제(3월)
*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 “한국과의 연계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 영구화”
-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최근 ‘위장간판’, ‘기만극’ 등 비난
*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6.13.)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 ‘비핵화 거부’ 공식 입장 지속 유지,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성 강조
* (외무성 대변인 담화, 6.13.) “비핵화는 종결된 사안”, “핵보유국으로서의 현 지위 절대 변경 불가”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 도전과 기회의 병존

- 북중·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 필요성에 대한 미·중·러 등 주변국의 공감대 확인
* (미중 정상회담 中 외교부 보도자료, 5.14.) 새로운 관계 규정으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합의 (중러 정상 공동성명, 5.20.) “외교적 고립·경제제재·무력 압박 등 북한의 안보위협 반대”
- 미-이란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는 미국의 대북 관여 가능성 대두
* 트럼프 美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사진 SNS 게재(6.13.) 및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 가질 때” 언급(6.16.)

○ 국민들은 ‘내 삶과 직결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구체적 미래상 기대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수립(’26.2월), ‘평화공존’ 지향에 대한 지지 형성
* (서울대학교 통일인식조사)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24년 43.1% → ’25년 52.0% (+8.9%p)
- ‘평화공존’ 대전제에 대한 공감에 기반, 구체화된 설계도 요구
* “평화공존구상 환영, 실현가능한 실천전략 기대”(’25.12월, 경실련), “정책 구체화, 국민적 공감대 확산 필요”(’26, 안보전략연구소), “한반도 평화, 개인의 삶과의 연관성 강조 필요”(’3.30, 통일연구원 통일인식조사)

□ 대응 방향

○ 한반도 평화공존의 구체적인 발전구상 제시 → ‘2026 평화공존 원년’ 추동

- **대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대북** 남북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하며,
대외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평화공존의 미래상을 실체화

○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진화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추진

- 8~9월 역량 집중을 통해, UN총회(9월)·선전 APEC(11월) 계기 성과 창출
- 북미 대화(새로운 관계 구축) → 4자 대화(평화체제) 성사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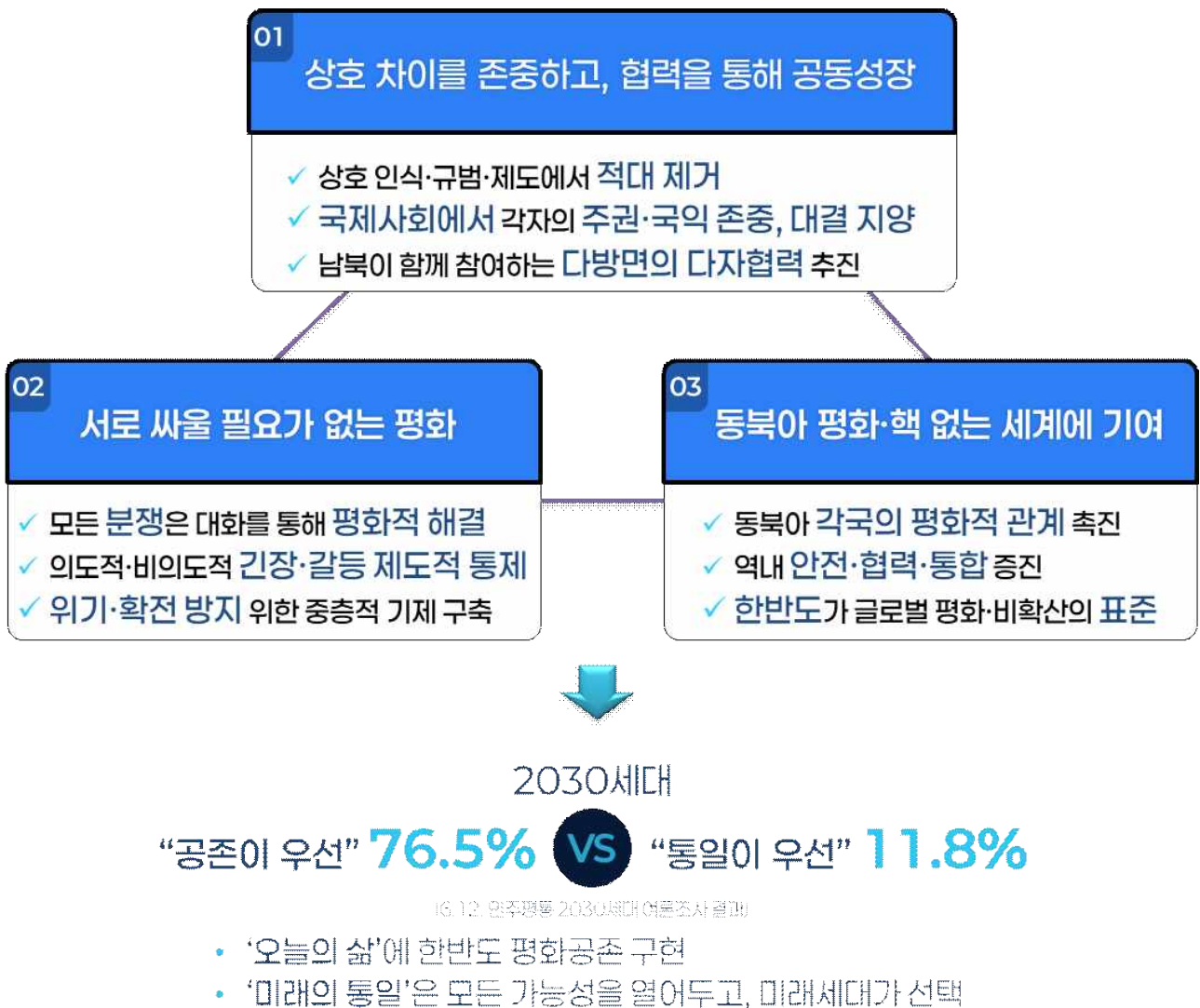
Ⅲ. 핵심 추진과제

1 역점 과제

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전 구상 마련(114-4)

□ 기본 방향

“남과 북이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길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7.1., 대통령님 민주평통 격려사)



□ 평화공존 발전 구상은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나아가는 설계도

- 발전 구상의 실현을 통해, ①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고 ②북한의 불신을 제거하며, ③평화우선 기조를 확립, ④통일의 미래지향성을 강화
- 그 결과, ‘적대적 두 외국 관계’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정립

□ 실천 조치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추진하며...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6.15., 교황청 국무원장 면담)

“우리가 말한 바를 지켜내며 진정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단단하게 빗장이 걸린 북의 대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7.1., 민주평통 격려사)

〔추진 전략〕

-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일관되게 이행
- 국민·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과 함께 추진
 - 공론화 과정 자체가 평화공존에 대한 ^{대북}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전달하고, ^{대내}우리 사회 내 평화공존 인식을 확산하며, ^{대외}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강화

〔실천조치〕

① (상호 존중, 공동성장)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평화공존 출발

- * “서로 이름 존중에서 평화 시작”(7.2, 종교지도자 원로회의) “평화공존 첫걸음, 상호 국호 부르는 것”(7.2, 민주평통) “상대 인정 첫걸음, 국호 호명”(7.2, 참여연대), “남북 공식 국호 존중해야”(7.3, 민족통일협의회)
- 올해 말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 발간 예정, ‘주적’ 등 공포·혐오 용어 대체
- 지난 정부 시기의 공세적·강압적 통일추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민족 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안 마련(320명 전문가 집단 구성, 인식조사 진행 중)

② (싸울 필요 없는 평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발표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시작, △DMZ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추진, ‘평화의 안전핀’ 장착

③ (동북아 평화, 핵 없는 세계 기여) △평화 선순환을 구축하는 평화체제 논의 개시, △평화선도형 평화체제 북핵해법 마련 △북미정상회담 성사 지원, 4자 평화선언 추진

“코리아 프리미엄 열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합니다.” (7.1. 민주평통 격려사)

이재명 정부 2년차 하반기 행동계획

“11월 선전 APEC, 하반기 평화공존 정책 이행의 핵심적 기회”

전략 목표

선전 APEC 계기 한반도 평화체제 여건 조성
북미 - 남·북·미·중 4자 - 남북대화 병행 추진

이행 방안

- 01 8.15 경축사, 한반도 평화공존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 02 하반기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평화공존 지지 확산

② 한반도 평화교류 재건 (115-1 / 118-3)

□ (정세변화 대비) 북미대화 가능성 대비,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평화선도구상(ready-to-go)’ 사전 구체화

○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25.12 업무보고) 준비 및 공론화 진행

-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대북제재 본격화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 규모 사업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완료(5월)

*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우선 평양 강동군 병원 1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상정, 진단·수술·치료 필수 의료장비 166종의 제재 면제 절차 완료

- (원산갈마 평화관광) 민간단체와 평화관광 공론화 사업 진행(6월~) 및 마·러·뉴질랜드 재외동포 단체와 재외동포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 협력

-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중국, 몽골 대상 설명 및 철도기술연구원과 협업

- (GTI 연계 협력) 대륙철도 등 GTI 틀내 협력 프로젝트 제안

○ 북미대화 진전시 우리의 전략적 역할 확보를 위한 협력구상 사전 준비

- 통일원, KDI 등과 협력, 상기 평화교류 협력구상과 함께 △희토류 등 광물개발 △접경지역 물-에너지 협력 △에스크로-블록체인 기술 활용 교역시스템 구축 등 공동성장 프로젝트 발굴, 대미·대북 협의 대비

□ (교류재개 모색) 민간단체·재외동포·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남북 간 소통·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

○ 민간 교류 재개를 위해 △대북 접촉 전면 허용 △정부가 유엔 제재 면제 절차 대행 △타당 사업에 기금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 지원

○ 北 내고향 여자 축구단 방한(5.17.~24.) 선례를 고려하여 국제 스포츠 행사 등 계기에 자연스러운 교류 추진

* (주요 행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9.19.~10.4.) △IWF 세계역도선수권대회(10.27.~11.8., 중국) △2026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11월, 싱가포르) 등

○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등 기존 역사·문화사업 재개 준비 및 그간의 성과를 국민 대상으로 확산

* △종이사전 편찬 완료('27.12월), '28년 보급 △전자사전 '27.10월 시범 개통, '28.3월 정식 개통

□ (교류 기반 구축) 남북관계 재개·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직접 교류·협력사업으로 용도가 제한

- 지난 10년간 남북협력기금(연 1조원 규모)의 집행률은 2~3%에 불과

○ 법 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도 기금 사용 허용(연내)

- 북한 직접 참여는 없지만, 남북교류협력에 연관된 사업을 기금 지원 용도로 인정하는 법안(2개)*이 既발의

* 박정의원 발의안('25.2.25., 접경지·평화경제특구사업에 기금 지원), 김영배의원 발의안('25.10.21.,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단체 사업·활동 등에 기금 지원) 외통위 법안소위 계류중

- 동 법안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 향후 적극 설득 노력

□ (평화공존 거점 건립)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전시·교육·연구·기록, 평화공존 공감대 확산의 구심점이 될 전문기관 건립

○ 동북아평화자료원(경기 고양) :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 이후 100여년의 동북아 전쟁·평화 역사와 북한자료를 망라한 세계적 아카이브로 추진('27년초 개원)

* 美 의회도서관, 獨 베를린자유대, 日 아세아경제연구소 등과 협력 MOU 체결 추진중

○ 한반도평화공존센터(서울 마곡) : 남북 화해협력史의 발굴·보존·연구와 국민 참여·체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27년 착공 → '30년 완공)

* 지난 정부가 '24년 북한인권의 정치적 이용을 위해 추진한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폐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정책 기조를 반영,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전면 재편

□ (미래비전 再설계) 통일부-경인사 협력下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구체화

○ 역대 정부가 계속 수립해온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변화된 글로벌 환경 대응과 우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재검토

* (기존) △北 체제 변화 유도 △北 노동력·광물 자원 활용 중심 ⇒ (재설계) △北 체제 존중 및 발전권 보장 △AI·디지털 전환, 바이오·에너지·해양 산업, 공급망 협력 등 공동성장 지향

③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선순환 구축(118-2·3)

□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경원선 복원사업 추진 및 중단 경과】

- '15.8월, 박근혜 정부, 한반도 3대 종단철도(경의선·동해선·경원선) 중 유일한 단절구간인 「경원선」 복원 재개 추진, 백마고지에서 기공식 개최(8.5.)
- '16.5월, 北 4차 핵실험('16.1.6.) 이후 공사 중지(토지 매수 99%, 설계 100%, 노반공사 3% 단계에서 사업 중단, 현재 현장관리·유지 등 사업 유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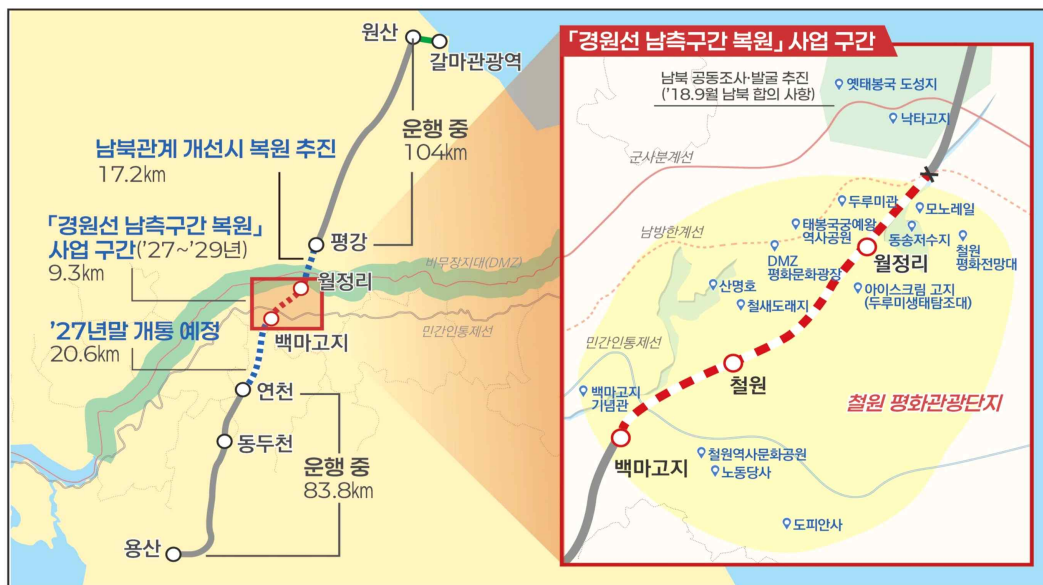
○ 접경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및 단절된 남북 철도를 다시 복원해 나가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단되어 온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 민통선 복상, 연천~백마고지 구간 재개통('27년 말)과 연계, 평화·생태 관광 접근성 개선을 통해 철원·연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창출

* 철원군 관광객 약 690만 명('25년 기준) 방문, 경원선 연장 시 대폭 증가 기대

- 北 일방적 단절에도 불구, 향후 '서울-연천·철원-원산갈마-금강산 관광 벨트' 및 대륙철도(TSR)로의 교두보가 될 선제적 연결기반 확보

* 부산→모스크바 기준 경부선-경원선-TSR 활용 시 해상(30~40일) 대비 수송기간 절반 단축



○ 이를 위해 우선 우리측 구간인 「백마고지~남방한계선」(9.3km) 복원 선언

- 올해는 △총사업비 증액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지뢰 제거 등 공사 재개를 준비, '27년부터 공사 재개('29년말 완공 목표)

-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DMZ(2.4km) 및 북측구간 연결 추진

□ (DMZ 평화적 이용) 우리 영토인 DMZ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국민 공감대 확보 노력 지속

○ DMZ 평화적 이용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지속

- DMZ법 제정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25.11월~) 마무리, 정부 차원의 통합대안 마련 후 △국회 △유엔사 대상 협의 추진

○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및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체감사업 추진

- 「DMZ 포털」* 개설(7.27.), 공론화 사업(‘우리들의 DMZ’) 거점으로 활용

* 여러 부처(행안부, 문체부, 기후환경부 등)·지자체·기관에 흩어져 있는 DMZ 관련 정보(지도, 환경·문화재 실태조사 결과, 연구자료 등)를 일원화하여 국민·연구자 대상 통합 서비스 제공

- 「DMZ 평화의 길」 정상화·확대(고성·철원), 판문점 일반견학(파주) 재개* 등을 위해 유엔사 협의 강화

* 주요외빈·정책고객 대상 특별견학 '25년 재개, '26년 총 23회 329명 실시(6.30. 기준)

- 서울~도라산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횟수(월 4회)·탑승 인원 확대

* '19.10월 이후 중단되었던 서울역~도라산역간 열차 운영을 6년 6개월만에 재개('26.4.10.)

□ (평화경제특구 지정)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25.12월 수립)에 기반한 특구 지정 추진('26~'27년, 4곳 내외 지정 예정)

* 지자체 개발계획 제출(1차: '26.9월/ 2차: '27.8월)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특구의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국비 지원 추진

* 남북 분단 및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 재원 구체화(△남북협력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남북협력기금 : 법률 개정 필요(박정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25.2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

4 인도적 문제 해결(116-1-2)

□ 이산가족·납북자 등 분단고통 해소 노력

○ (위로) 이산가족·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위로 지속·다각화 “보듬다”

- △제4회 이산가족의 날(9.23.) △권역별 초청행사 △고령 가족 방문 등
- * △「납북자 기억의 날(6.28.)」 대통령 기념사 △초청행사(상반기 2회, 하반기 5회 예정) △납북자 가족 방문(2.12., 6.25.), 억류자 가족 위로금(6.18.) 등

○ (기록) 기록·보존사업 및 교류 준비 “기억하다”

- △기록사업 근거 규정* 마련 및 기록물 수집 착수 △현 정부 내 수집·보존 완료율 목표로 ‘생애기록물 수집 기본계획’ 수립*(연내) △영상 편지(1,000편) 및 유전자 검사(1,500건)도 지속
- *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25.12.30.) △전시납북자법(26.2.27.)
- 민간단체와 협업 下, 「6.25전쟁납북자기념관」 내 기록관 조성

○ (공감) 미래세대 대상 화해·공존·평화 공감대 확산 “이어가다”

- △이산가족 주제 미술 작품·생애기록물 등 전시 △토크 콘서트 개최

□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모색

○ 지난 정부의 공세·대결적 접근 기조 탈피,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프레임 전환

- * (해외) △UN인권최고대표(장관, 5.13.),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차관, 2.5.) 면담 (국내) △차관-주요 북한인권단체 대표 면담(2.13., 4.27.)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 신뢰·협력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정책 추진 및 제도화

-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등 부문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계적 협력 방안 모색
-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등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식량·건강권 및 장애인·여성·아동 관련 정보 수집·분석
- 국회의 북한인권법 개정 논의 지원, 지속 가능한 인권협력 여건 조성 노력

5 북향민 정착지원 체계 강화(116-3)

□ 자율과 개방의 하나원으로 전환

- 하나원 교육생들의 숙원이었던 스마트폰 최초 지급('26.1월)
 - 지정 기부금 활용, 휴대폰 구입 후 수료생 지급(8월~), △既 정착 가족 등 조기 연계, △IT기기 활용 실습으로 정보접근성 확대
- 화천 분소를 (가칭)「국립사회통합원」으로 전환 추진(연내)
 - 북향민 직업교육·심리치료 등 사회통합 중심기관으로 기능 전환
 - 화천군민에게 시설 개방, 의료서비스(내과·치과·한방과 공중보건의 3명) 제공

□ 북향민 자살을 낮추기 대책 추진 * 최근 3년간 북향민 평균 자살률(46명)은 일반 국민 대비 1.7배

- 위기 북향민 기초 데이터 파악, 선제적 발굴 관리 강화
 - 일반 실태조사(5~6월) 완료, 위기 북향민(약 1,800명) 심층 조사(6~8월) 실시
 - △복지부 연계 위기가구 정보 공유(지속) △하나센터를 통한 연락처 현행화·유지
- 위기 북향민 대상 상시 연락·대응체계 운영 및 지원 확대
 - △하나원 콜센터 설치(1533-2020, 24시간 운영) △AI 돌봄 전화(안부확인·복약지도·건강점검) 도입('26.7월~) △고령·독거·한부모 가정(1,380명) 주 2~3회 요구르트 배송을 통한 안부 확인 확대 운영 등
 - △의료비 및 생필품 지원 확대 △생일케이크 발송 등 지원 사업 병행

□ 북향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

-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민간(후원)」 협력체계 정비
 - * △25개 하나센터-하나재단 협력 워크숍(4.21., 5.28.) △8개 종교·직능단체와 취약계층 후원 업무협약(4.16.) △심리상담센터 마음 숲(중부) 개소(5.7., 2 → 3개) △'북한이탈 주민(북향민)의 날(7.14.) 개최 및 '북향민' 명칭 확산(공공부문 → 민간) 등
- 북향민 지원 사회복지사·통합지원교사·상담사 처우 개선
 - 공정성·형평성에 입각, 북향민 지원 종사자 호봉제·수당제도 도입
- 북향민 교육·취업 지원 강화
 - △북향민 청소년 특수성을 감안, 대안학교 지원(약 44억원) 지속(교육부·교육청 협업) △북향민 WEST(한미대학생 연수) 참여인원 확대(4명→10명)
 -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 완화(연평균 5% → 3% 고용) △우선구매 제도 대상 확대(기존 모범사업주 이외 북향민 소유·경영 기업 추가 등)

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117-3)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은 필요한 일.. 확대를 대폭하는 게 좋겠습니다.”
(25.12.19,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

-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26.2월)
 - 평화공존, 대화와 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원내교육과정 전면 개편 및 기본방향 발간·배포 등 패러다임 전환 완료
 - 교육원 교육생 현장견학 강화, △국립4·19민주묘지 △독립유공자묘역 △근현대사기념관 등으로 확대, 헌법가치 기반 평화통일·민주주의 교육 강화
 - * 대통령 지시사항(4.28): “헌법교육에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 등 다양한 가치 포괄”
- 1020세대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강화(연중)
 - 초중고교(12,000여개) 교사 등 3,940명을 제25기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으로 위촉(1차, '26.6월), 2차 확대 추진(6,000여명 추가 위촉)
 -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활동경비('27년 총 100억원 규모로 기획처와 협의 중) 지급을 통해 참여도 및 의욕 고취, 학교 현장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도모
 -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신규 실시 등 체험교육 확대
 - * 청소년 1,000명, 교사 200명 대상 총 10회 실시 중(5~10월)
- 사회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원칙 관련 합의 도출(연내)
 - 독일의 정치교육 관련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76년)를 참고, 한국형 평화통일민주교육 방향 관련 사회적 합의 마련
 - * 정치교육 3대 원칙: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관심 유도
-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임기제교수제도를 전임교수제도로 개편(연내)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전문임기제 교수요원(일반직 9명) 제도를 국립외교원과 같이 전임교수요원(특정직)으로 개편*, 전문성 강화 및 안정성 부여
 - * 하반기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전문임기제, 일반직)	신분보장 최대 10년 (5년+5년)	승진제도 부재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특정직)	교수 정년(65세) 보장 * 부교수(5~7년), 조교수(4~6년)	승진제도 존재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2 현안과제

① 소통과 참여를 통한 2030 청년 주권 실현(117-1)

국민참여권 침해 관련,

“(주권 행사)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 귀하고 존경”, “근본적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
(6.8., 2026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 통일부 內 경청 전담조직 신설, 국민이 주인인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구현
 -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 운영, 다층적 ‘경청·소통’ 플랫폼 역할
 - ‘청년’이 주인공인 경청 생태계 구축을 위해 외부인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를 단장으로 영입
- 고양된 청년의 주권의식을 한반도 평화공존 미래로 전환
 - 시국선언 참여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의 의견을 직접 청취, 이를 정책으로 잇는 ‘평화경청 ON 캠퍼스’ 프로그램 운영 중(경희대·외대·성대 完)
 - △장관-청년 미래대화 △통일부 청년인력(2030 자문단, 청년인턴) 대상 정례 소통 △평화경청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 현장 목소리: 평화경청 ON 캠퍼스(7.2, 경희대) 〉

- ▶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선언’을 계기로 주권자로 나선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주권자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감사”
- ▶ “통일은 삶과 동떨어진 주제라고 생각...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변하는 모습을 보며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음.”
- ▶ “청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호기심을 이끌려는 노력과 계기 부족 → △청년 공감 정책·콘텐츠 △통일과 청년을 연결하는 정보 제공 등 점점 확대 희망”

- 민간주도 사회적 대화 본격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형 속의 플랫폼 구축
 - 의제선정 단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국민/청년 2트랙 접근)
 - * '26년, 권역별 국민(15회)·청년(9회) 주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의 방향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원칙 등 평화공존 담론의 장 구현
 - 시민의 정책 참여와 속의 확대를 위한 미래형 AI 속의대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26년 시범사업 → '27년 본사업 확대 예정)
 - * 속의토론 쏠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AI를 통한 대화 촉진·자동화 시스템 구축

3 정상화 과제

①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117-4)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신뢰하여 원칙대로 할 것”
(25.12.19,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

- 기존 ‘비공개·제한’ 중심의 북한자료 관리 정책을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에 부합하는 ‘공개·이해’ 중심의 합리적 시스템으로 전환 중
 - 북한자료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을 넘어서 △남북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공존 단계 전환의 첫걸음
 - 국민들이 제한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26.2월)
 - * 노동신문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자료(‘노동신문 바로읽기’ 5편) 제작·공개
 - 북한자료 자문회의 신설, 공개 중심 제도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중
 - * △특수자료→일반자료 재분류 공개 확대 △북한 사이트 개방 △학술·연구 편의성 제고 등
- 국회에서도 북한자료 제도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 제·개정법안 발의
 - △북한자료의 관리 주체 이관(국정원→통일부)과 국민 접근성 제고 등 내용의 ‘북한자료법’ 제정안(3건) △북한사이트 개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건)
⇒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북한자료 공개·활용 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 준비
 - 북한자료 공개 확대에 대한 일부 우려 제기 고려, 청소년·학생용 이용 안내서 제작, 북한자료를 올바르게 읽는 교육 등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
- 내년 초 개원하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현대사 자료의 보고로서, 국내외 연구자가 찾는 세계적 평화 아카이브로 구축
 - 단순 도서관이 아닌 △동북아 평화·북한자료 아카이브 △동북아 현대사의 전사·교육·연구·기록 △북한자료 심의·재분류(대국민 공개 확대) 등 복합적 기능
 -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국내외 어디에서나 동북아 평화와 북한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 현재 북한 연구자 및 언론인 등은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해야 열람·이용이 가능하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